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2019년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뜨거웠다. 곳곳에서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홍콩을 필두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체코, 칠레, 볼리비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카자흐스탄, 조지아 등 지구촌 곳곳 도시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파괴 파워’를 과시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 뿌리깊은 부정부패,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민주화와 분리독립 등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다양하고도 다양했다. 영국의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흐름을 ‘제3의 반정부 시위 물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독자들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홍콩 시위대’를 꼽기도 했다.

지구촌 시위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생활고,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폭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체로 정부와 기득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와 무능이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을 최소 30페소(약 50원) 인상하자,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하루 20센트(약 23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글부글

너무너무 허약한 민주주의

끓고 있던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란에서는 정부가 한밤중에 휘발유 가격을 갑작스럽게 인상하면서, 예페도르에서도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보수와 진보의 이슈 싸움이 광장으로 시민을 불러냈다. 올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조국 일가’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불거지자 광장은 돌로 갈렸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집회 현장에서는 연일 상대방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집회현장은 폭력·불법행위로 얼룩지면서 여름부터 광장은 갈라진 민심으로 별걸레 달궈졌다.

민주주의와 합의가 작동되지 않고 광장에서 악다구니만 넘쳐난 한 해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민들이 또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온 배경으로 ‘허약한 대의민주주의’를 지목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 해결능력이 미숙함을 드러내고 진영논리가 제도권 정치를 집어삼키면서 ‘광장 정치’가 빈틈으로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는 현안이 발생한 뒤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다시 나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서 풀어

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온갖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산했고, 그 속에서 광장 정치가 치열하게 표출되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포용적·합의적 정치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능한 것은 국회였다. 올해 벌어진 보수와 진보의 집회가 양측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립 양상을 띠는 점은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다. 광장이 진영에 갇히면서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닫힌 광장이 되고 있다.

국민의 에너지를 광장으로 내몰며 정당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2019년 내내 무한 뒤흔들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매번 충돌하면서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췌였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급기야 국회는 물리력 행사로 갑금, 멸살잡이와 고성, 욕설 등 온갖 불쌍사나운 모습을 다 연출했다. 12월 들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다. 그러자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의 8일간 단

식 농성, 필리버스터를 통한 원천 봉쇄 등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6일에는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규탄대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하며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은 2만3천523건이다. 처리된 법안은 7천194건으로 처리율은 30.6%(계류법안 1만6천329건)에 그치고 있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치는 국회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폭력사태는 세밀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7일 국회 안에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인 16일 집회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고 더불어 민주당·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계속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끌어들이던 집회 참석자 일부는 설혼 민주당 의원의 안경을 깨뜨리고, 선거법 처리 촉구 농성을 벌이던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은 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이런 건 의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법적 의사 절차를 방해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제가 아니다.

이런 국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社 說

안일·졸속 행정으로 혈세 낭비해서야

광주 서구청이 안일한 행정으로 지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다는 보도다. 구청 내 부서별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또는 용역 등을 통해 행사 프로그램을 통합,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구의회 강인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에 따르면 축제 및 행사성 경비는 10억여원, 물품 및 비품 구매 예산은 17억여원에 달하는데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강 의원은 “현재 서구는 4개의 축제와 14개의 행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전시·일회성인 데다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많다. 이를 통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사 행사인 ‘달빛 작은 음악회’와 ‘도심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면서 각각 8천여만원, 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서에서 제각각 구매하고 있는 17억여원의 물품 예산도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 의원은 주장한다.

서구청의 졸속 행정 논란은 얼마 전 있었던 해외연수에서도 나왔다. 서대석 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국외여행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 심사가 의결, 허가가 이뤄지면서 사전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4조에는 “책임자는 공무원의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출국 예정일 20일 전까지 심사요청서·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말이다. 서구는 당시 서 청장과 공무원 등 8명에게 1인당 370만원씩 총 2천96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축제와 행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행사 성격을 점검해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히 통합하고 예산 절감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의회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민의 반응이 민감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연수 목적과는 다른 여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해외연수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실행돼서는 안 될 일이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 억장이 무너진다

연말연시가 광주지역 자영업자에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때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수년째 가장 높다고 한다. 광주는 울산과 함께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율도 광주가 수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최근 국제청의 자영업자 폐업률(작년말 기준)에 따르면 광주와 울산이 12.2%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다. 대전(11.6%), 인천·경남(11.4%), 경기(11.2%), 충남(11.1%), 충북·경북·전북(11.0%) 순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았다. 광주는 지난해에 앞서 2016년 13.6%, 2017년 13.2%를 기록하며 3년째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율(올 6월말 기준)도 광주가 0.42%로 최고다. 전국의 평균 연체율은 0.31%다. 광주에 이어 서울 0.38%, 부산 0.36%, 대전 0.35%, 대구

0.31% 순이었다. 광주는 4년째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 역할까지 떠맡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갈수록 대출은 늘어나고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매출 부진까지 겹쳐 고용하던 아르바이트생 2명 뭉까지 홀로 도맡아 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늘어나는 건 빚뿐이란 하소연이다. 그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킨집 영업을 끝낸 이후 대리운전 같은 일이라도 병행해야 할 판”이라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거나 빚내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각종 경제지표가 우울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사업을 할만 할수록 적자를 기록하는 이들에게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은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하다. 슬프지만 우리사회 양극화의 단면이다.

기 고



류 진 창

㈜와이드 팜 상임고문

벌써 저무는 한해를 맞고 있다. 빠른 세월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지는 설날이다.

나뭇가지에 하나둘 달려있는 마지못해 밤바에 그란 차가온 길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 절기적으로도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는 대설과 소한을 맞는 시기가 된다.

빠른 세월을 쓴 살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아 하였던가?

추위는 그의 권학시(勸學詩)에서 ‘연못가 화초들은 아직 봄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물 앞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 노래한다’ 비유하였다.

개인이나 직장마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하는 분주한 시점이 바로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은 지금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한해가 되었다. 하고자하는 일 들 마다 뭇뚱 하면서도 엉뚱한 구실로 번번이 허사가 되었으니 말이다.

좋아하는 프로야구 또한 실종된

노변한담(爐邊閑談)

해태정신은 물론 명문구단의 면모는 아예 찾아 볼 수 없는 졸전만 벌이다가 시즌 중반에 갑자기 경질되며 처참한 성적표를 내 놓고 말았다.

경제는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경기 부양정책을 써 봐도 지표를 하향수정하고 있으니 국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국민 부채가 개인당 1천700여만 원이라 하는데도 지자체 마다 앞다퉈 벌이는 축제장에는 돈을 물 쓰듯이 펴버려 쓰고 있다는 생각이나 정녕 이래도 되나 하는 불안이 생긴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는 어떠한가?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자력경쟁을 외치는 김정은의 종잡을 수 없는 변덕에 일회일비해야 하는 암울한 우리의 처지다. 지정학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에서 제갈공명 같은 지혜를 찾을 수는 없을 까? 짧은 견해이었지만 우선 이스라엘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대중화가 지상 명제라 싶어진다.

우리는 하나가 되자고 외쳐도 신통치 않은 판에 견해가 다르다 해서 분열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본은 우리의 민족자존에 오욕의 역사를 안겨준 나라다.

그런한 일본이 우리에게 누적 700조원의 무역흑자를 내면서 일도당토 않는 구실로 우리의 핵심 반도체 산업에 부품공급을 중단하며 목줄을 조이고 있으니, 이는 질식사 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 판국에 모 유수한 정당의 대표는 우리의 대응 카드인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며 죽기로 단식을 하였단다. 이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익이라는 대의에 반하며 국론분열을 조장 하는 반민족의 행위가 될 것이다.

주말이면 태극기부대와 촛불이 온통 나라를 어지럽히며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이른바 조국사태는 어떠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자다 아니다는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여부나 공정한 수사시비도 뒤로 미루겠다.

요체는 정부의 국정 수행능력에 커다란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36일 만에 물러날 사람을 왜 장관에 임명했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말이다. 국민에게 는 그만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며 국론 분열과 국회를 소모시키면서 무엇을 얻고자 그랬단 말인가? 근시안의 정책에 엄청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여론 물이 정치판으로 전락시킨 정치력 부재의 여야 정치권에도 강한 회초리를 들고 싶다. 입만 열면 국민을 말하는 우리의 대표 국회의원은 남는 세계 어느 나라 의원보다도 가장 융성한 대접을 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장에서 대상자를 볼썽 사납게 힐난하고 욕박지르는 것은 보통이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짚어 던지는가 하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놓고도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히 넘어가는 우리의 대표님은 품위 상식과는 거리가 먼 안하무인의 강패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오직 했으면 국회의원을 수임해야 된다는 조소가 있었는가?

그런가 하면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선도하고 정론직필을 표방하여야 하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들조차 본연의 사명을 일탈하여 편향보도를 일삼고 있으니 허망한 마음을 잡을 수도, 논이 머무를 공간도 없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그래도 가난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지구촌의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의 훈훈한 미담이 있으니 따뜻한 한해를 보낸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온 누리를 비추는 희망의 태양이 동녘에서 떠오를 것이다.

그래픽 뉴스

작년 건설업 매출액 0.6% 증가…1999년 이후 최소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에 건설업 매출액이 0.6%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건설업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5.5% 증가했지만, 그 외 기업은 2.1% 줄어 업계 내 양극화는 심화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부문)’를 보면 지난해 건설 기업체 수는 7만5천421개로 전년보다 4.2%(3천45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1만39개, 기반조성·건물설비·마무리공사 등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만4천382개로, 각각 전년보다 4.0%, 4.3%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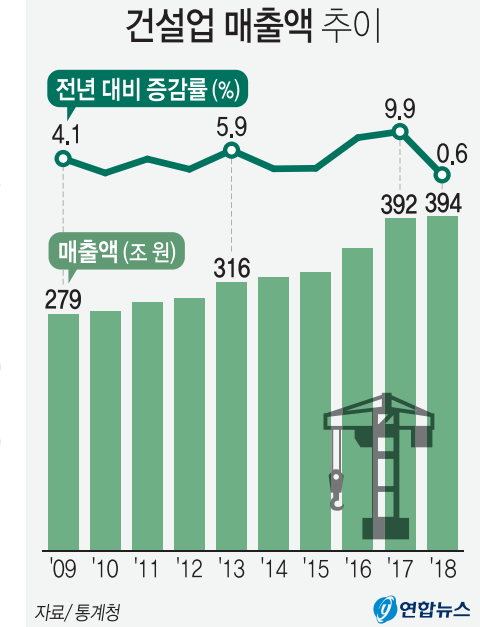
이들 업체의 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은 394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6% (2조2천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매출액 증가 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1.1%) 이후 가장 작았다.

이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2015년에 건설공사 계약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2017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6-2017년 건설업 매출액은 많이 늘었다”면서 “2015년 당시 계약에 따른 공사가 끝나면서 매출액도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종합건설업 매출액이 244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2015년(-0.4%) 이후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토목건설업 매출액(29조5천억원)이 전년보다 20.7%인 7조7천억원 급감해 건물건설업 매출액(214조8천억원)은 3.2%인 6조8천억원 늘었는데도 전체 종합건설업 매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49조9천억원으로 2.1% 늘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가족 행복은 심야 교통법규 준수에서 시작

간혹 심야에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야간에 한적한 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른 차량도 없고 보행자도 안보이니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한 두 번 쏘는 해를 올 것이다.

우리는 도로 주변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또한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그런 사고가 앞서 말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주행하면서 단속을 피해 곡예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있어 대형사고 발생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이런 곡예운전을 멈추지 않거나 영엄용차량 운전자들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임

을 깨달아야 한다.

심야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나 단속카메라가 있으니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우리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허기랑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